



최근 주요국의 연금 개혁 현황

이아름 연구원

-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및 남미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 벨기에, 그리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경기침체 지속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지 축소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일본에서도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연금 지급액 삭감 계획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음.
- 최근 벨기에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고 공공 부문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그리스도 2014년 말까지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만 복지 개혁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벨기에 정부는 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긴축정책 반대 시위에 시민 10만 여 명이 동참함.
 - 그리스 정부는 2011년 34만 명의 연금 수령자에 대해 12%의 연금을 삭감하였고 2012년 다시 일반 연금을 삭감하였으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 2014년 3월 영국도 경제회복과 소비 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을 비롯하여 법인세 인하, 개인 저축 활성화 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 2014년~2015년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발표함.
 - 영국 정부는 사적연금 역할 확대를 통한 공적연금 역할 대체를 목표로 연금 개혁을 단행하여 사적 연금을 의무화함.
 - 영국 정부는 사적소득보장 강화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적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영국 정부는 연금부채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에서 가입자가 자산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로 전환을 유도함.
- 독일의 경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연금개혁을 시작하여 현 정부도 지속적으로 연금보험제도 관련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슈뢰더 전 총리는 연금 수령액을 소득의 60%에서 54%로 낮추었으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와 같은 개혁 기초를 이어가고 있음.
 - 메르켈 정부는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연금보험요율을 2007년부터 기존 19.5%에서 19.9%로 인상하였음.
- 일본에서도 연금 개혁을 위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연금 삭감과 연금 적립금의 주식 운용 비율 확대 계획을 발표함.
 - 2004년 일본 정부는 ‘자동재정안정화장치¹⁾’에 기초한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지급액을 연 1%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디플레이션 제한 규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2015년 상반기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 또한 일본 정부는 연금 수익률 확대를 위하여 연금 적립금의 주식 운용 비율을 확대할 계획임.
- 과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을 적절히 조절하고 연금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보충하며 성공적으로 연금 개혁을 단행함.
 -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공무원 연금 운영 방식을 전환하였고 수급자 간 공평성을 높이고자 연금산정 기준소득도 기존 15년 평균 소득 개념을 폐기하고 전 생애 평균소득을 채택함.
 - 2005년 오스트리아는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시키고,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변경하면서 성공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함.

(한국경제, OECD 등)

1) 공적 연금 재원 안정성을 위하여 연금 가입자 감소, 고령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급여를 변동시키는 제도임.